

플라스틱·섬유업계와 함께 제8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5.21.(목) 중동전쟁 대응 플라스틱·섬유산업 현장간담회
- 업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검토, 청년 구직자 유입 등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권창준 차관 주재로 5월 21일(목) 14시, 플라스틱·섬유업계와 함께*하는 제8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이 플라스틱·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고용위기 확산 방지에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플라스틱·섬유산업 기업 대표 등 참석

플라스틱·섬유업계 모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산업은 주원료인 합성수지(PE, PP, PET 등) 가격이 지속 인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가 약 80%(2.1만여개)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26.4월 플라스틱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7.5만명으로, '25.1월부터 전년동월 대비 1% 수준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 중동전쟁 전후 폴리에틸렌(PE) 원료 가격:

- ▲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26.2월 130~140만원 → '26.5월 260~280만원,
- ▲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26.2월 167~177만원 → '26.5월 280~300만원

섬유산업 또한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26.1~4월 중동 수출액이 35.6% 감소하고 중동행 수출 주문에 대한 해상 운임 증가(단기간 3배)와 함께 납기 지연에 따른 주문 취소·반송사례 증가로 수요처 이탈 및 거래 신뢰도 하락 등도 겪고 있다. '26.4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섬유 제조업 8.8만명으로 '21.9월부터, 의복 제조업 4.6만명으로 '16.10월부터 장기감소 추세이다.

* 화학섬유 주요 원료가 변동 현황(폴리에스터 섬유, 톤)

- ▲ PTA: '26.2월 1,103천원 → '26.5월 1,459천원 ▲ MEG: '26.2월 803천원 → '26.5월 1,108천원

이 날 간담회에서 플라스틱·섬유업계는 중동전쟁이 고용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다각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 고용보험료 납부유예 등과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이 크다며, 산업 지속성을 위해 청년 구직자 유입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 ①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다각적으로 개편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시에 지원한다. 5.6일부터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여 지원 중이며, 5.12일부터는 유급고용유지 조치시 지원요건을 개편*해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에도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작성한 신청 서류를 협동조합 등 사업주단체가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전) 사업 전체 총 근로시간 단축 → 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

- ② 고용위기 확산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위기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5.4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섬유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정량요건 산정기간 단축(12개월→6개월),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직(회사사정 이직)도 포함

**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상향(우선지원1일 6.8만원→7만원),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상향(납부보험료의 100%→130%),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6개월) 등 지원

- ③ 청년 구직자 등 유입을 위한 지원에도 힘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속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섬유산업이 밀집한 권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데이** 등 채용지원서비스도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등

**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로서 채용면접, 직무특강, 취업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요일'에 집중 운영

권창준 차관은 “당장은 체감되는 고용위기가 없더라도 작은 징후가 큰 고용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고용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담당자	서기관	장지훈 (044-202-7027)
			사무관	김진영 (044-202-7028)
			사무관	차정환 (044-202-7032)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정철수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이사장님,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플라스틱·섬유업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플라스틱과 섬유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이자,
제조업 공급망과 수출 경쟁력을 든든하게 떠받쳐 온
대한민국 경제의 소중한 기반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증동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가파른 가격 상승과 함께
증동수출 감소 및 해상운임 급등이 가중되면서,
현장에서 수익성 악화와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는 눈 앞에 닥친 뒤 대응하면 늦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은 징후가 큰 고용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고용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두 차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업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출액 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적극 인정하고,
지원 유형을 단일화하여 지원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현장 상황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지난 5.4일,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섬유 업제의 신청이 있으면
업종별 위기 상황에 맞춰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재직자 훈련과 고용안정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등 구직자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라스틱·섬유 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해 채용지원서비스도 집중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적시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지, 어떤 지원이 절실한지
가감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정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토대로
업체와 고용노동부간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업황 악화, 채용 감소, 휴업 확대 등
작은 이상징후라도 감지되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현장에서 올려주시는 경고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조치를 기민하게 검토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고유가가 일상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위기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위기는 노동자에게는 생계의 위협으로,
기업에게는 숙련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매우 큰 피해를 남깁니다.

정부와 업체가 모두 경각심을 잃지 않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의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